

#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6·3 지방선거 구도 '지각변동'

특별시장, 두 광역단체장과 다선 의원들 각축…민주 경선방식 관심  
문인 광주 북구청장 사퇴 철회 3선 도전 나서…입지자들 강력 반발  
민주당 하위 20% 평가 마무리…구청장 등 11명 컷오프 포함될 듯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오는 6·3 지방선거에 파장을 부르고 있다.

광주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문인 북구청장이 사실상 3선 도전으로 방향을 트는 등 존 선거 구도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리셋(Reset)'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문인 북구청장은 이날 마감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 '기초단체장'으로 등록했다.

문 청장 측 관계자는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광주시장 선거 자체가 없어지고 통합 단체

장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행정통합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기 위해 일단 기초단체장 예비자격 심사를 신청했다. 아직 거취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변수에 대한 대비'를 내세웠으나, 체급이 대폭 상향된 통합 광역단체장보다는 현실적인 3선 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청장은 지난 7일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예고했던 사퇴를 철회하고, 최근 예정됐던 출판기념회까지 연기하며 거취를 고심해왔다.

문 청장의 시장 도전을 예상하고 출마를 준비하

던 후보군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북구청장 출마예정자인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문 청장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광주시장 출마를 신청했음에도, 불과 2주 만에 이를 변복하고 광주시당에 북구청장 출마를 신청했다"며 "지난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3선 불출마'와 '2월 3일 이전 사퇴'를 공언해놓고 며칠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4조는 '당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 청장의 행보가 과연 이 규정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싶다"고 반문했다.

문 청장의 '회군'(回軍)은 행정통합이 불러온 '직격탄'의 단적인 예다.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출범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막강한 위상과 권한을 가진

통합 단체장 자리를 놓고 '별들의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선거가 시·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거물급 인사 10여 명이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민형배(광산을)·정준호(북구갑) 국회의원, 이병훈(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전남권에서는 3선 도전이 유력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신정훈(나주시·화순)·주철현(여수갑) 의원 등이 경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선 방식도 관심사다.

후보 낙점을 막고 흥행을 유도하기 위해 다수의 후보를 조별로 묶어 경쟁시키는 '조별 리그' 방식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광주와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후보 간의 '합종연횡'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이날 현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하위 20%' 평가 작업을 마무리했다.

광주에서는 구청장 1명과 시의원 4명, 전남에서는 시장·군수 3명과 도의원 11명 등이 하위 평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지역 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하위 20%에 포함되면 경선에서 20% 감산 폐널티를 받게 돼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 이슈가 모든 선거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후보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분주하다"며 "예비후보 심사와 하위 20% 통보가 본격화되면 선거 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주철현 여수 국회의원 광주에 '통합 찬성' 현수막 왜?

정당 현수막 갯수 동별 2개 제한…지자체 '불법' 규정 철거 나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출이 추진되면서 전례 없는 '정당 현수막 원정 계시'가 광주시와 자치구의 난감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이 광주 시내에 행정통합 찬성 현수막을 내걸자 광주시 일부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로 규정하고 철거에 나섰다.

20일 광주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 갑) 명의의 현수막이 광주 주요 교차로와 거리에 게시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적극 환영, 이제명 정부 통큰 지원을 대도약의 계기로'라는 문구와 함께 주의원과 이제명 대통령의 사진이 담겼다.

북구와 남구, 서구, 동구 등은 주 의원의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판단하고 이날부터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광산구는 철거를 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의 개수 제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정당의 정

책이나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 구청은 각 동별로 배정된 2장의 현수막 퀴터(활터)를 해당 지역구의 지역위원회가 이미 모두 소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수거가 나섰다.

실제로 광주지역 대다수 동에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명절 인사, 정책 홍보 현수막이 이미 게시돼 있는 상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장 단속반이 일일이 모든 현수막의 개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지역 위원장들이 뒷짐을 채우고 있다"며 "타 지역 위원장의 현수막까지 허용할 경우 범위가 무색해지고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질의의 결과 타 지역 위원장 이라 하더라도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계

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이 경우에도 동별 2개라는 총량 규제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해석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동별 퀴터가 비어있는 곳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현수막 원정 계시'라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낸 것이다. 일종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주 의원 측은 정당 현수막 제재와 관련 광주시당과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라는 대도약의 기회를 정당 차원에서 함께 축하하고 힘을 실자는 선의로 진행한 일"이라며 "모든 동에 2개씩 다 건 것도 아니고 주요 지점에만 게시했다. 옥외광고물법상 정치 현수막을 동별로 2개까지만 걸 수 있다는 규정을 개별 정치인마다 각각 2개씩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예초기 실기시험

20일 광주 북구청 효죽공영주차장 앞에서 열린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참가한 응시자들이 예초 장비와 전동기 작동법 등 실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시, 즐기고 머무는 전통시장 만든다

29곳 콘텐츠 개발·안전 인프라 확충…특화 시장 조성

광주시가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공모 사업에서 14억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6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결과,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9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국비 14억6000만원을 포함

해 총 20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장별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과 경영 현대화, 안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분야별로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시장을 연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무등시장과 용봉파선의거리가 새로 이름을 옮겼다.

이 사업은 단순한 물건 구매를 넘어 관광과 쇼핑이 결합된 특화 공간을 조성하는 2년짜리 프로젝트다. 지난해 선정된 남광주시장과 함께 총 3곳이 지

역을 대표하는 명소형 시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시장 경영 지원' 사업에는 대인시장, 양동복개상가, 운암시장 등 25곳이 선정됐다. 이를 시장에는 전문 시장 매니저와 배송 매니저가 배치돼 마케팅과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온라인 장보기 등 비대면 거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오래된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 사업 외에도 자체 예산을 들여 12개 시장의 낡은 시설을 손보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 토지 면적 축구장 168개만큼 늘었다

전년보다 1.2㎢ 증가

전남의 토지 면적이 전년보다 축구장 168개 규모인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말 전남의 토지 면적은 1만 2364㎢, 593만 평지로 확정됐다. 전남의 토지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의 12.3%로 전국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넓다.

토지 면적 증가는 무안 오룡지구 택지개발 6단계 준공과 목포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대단위 공유수면 매립 준공의 영향이라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시군별로는 해남(1045㎢), 순천(911㎢), 고흥

(807㎢) 순으로 증가된 면적이 많았고, 목포시와 무안군도 각각 0.5㎢씩 증가했다.

전남의 토지는 임야가 56%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농지가 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각종 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으로 도로, 철도, 공장용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확정된 지적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광주문화신협

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